

당 대표 중국방문 전문기간담회

□ 일 시 : 10월 22일[火] 16:30

□ 장 소 : 국회 의원회관 918호

동북아 지역질서의 전망과 한국의 외교전략

김기정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1. 글로벌 권력 구조 변동

- 미국과 중국 간의 글로벌 차원의 권력구조 변동이 동북아 지역질서 변화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는 전환기적 질서의 초입에 서 있음.
- 전환기 질서의 핵심은 미국 패권의 쇠퇴라는 추세에서 연유함. 미국 패권 쇠퇴는 패권 쇠퇴의 불가피성으로 설명이 가능하고, 다른 한편 탈냉전기 미국 외교정책의 실패로서도 설명이 가능함. 미국은 부시 행정부 기간을 거치면서 개입전략 (engagement)을 위한 ▲국력 투사의 한계, ▲국익 판단의 자의성을 극복하지 못했고, ▲보편적 가치를 중심으로 하는 글로벌 리더십의 합의구조를 만드는 것에 실패했음. 2003년 이라크 침공은 패권적 리더십 쇠퇴의 상징이었고, 전쟁 개입과 확전에 따른 비용의 증대, 그리고 국력 투사의 무분별한 남발은 재정수지 및 경상수지 위기를 악화시켜 미국 패권의 쇠퇴를 가속화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했음.
- 2008년 미국발 세계금융위기는 미국 쇠퇴를 상징하는 진혼곡과 같았음. 미국이 세계경제의 버팀목이 아니라 세계경제위기의 근원이 되었다는 사실이 충격이었음. 세계금융위기와 미국 리더십의 상대적 쇠퇴는 세계경제 성장축의 변화와 함께 나타났음. 동아시아 지역 국가들의 경제생산력이 미국, 유럽의 생산력을 급속하게 추아가고 있고 동아시아 역내 교역도 함께 급성장하였음.
- 동아시아로의 세계경제 성장축 이동의 중심에 중국이 있음. 중국은 경제성장 위주의 정책을 지속하면서 세계의 공장, 세계의 시장으로 급부상해 왔고, 동아시아 역내 경제의 조립생산 중심지 역할

(assembly center)을 맡고 있음. 중국 생산력은 일부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더 빠른 속도로 증가추세를 보이면서 미국에 도전하고 있음. 현존 세계질서의 골격을 유지하려는 미국은 중국에게 질서 유지의 책임을 중국에게 요구하고 있음.

- G-2 거버넌스에는 현상유지와 대립의 요인들이 중층적으로 얹혀 있음. 미국은 중국의 협력적 편승을 기대하고 있지만, 동시에 도전국 부상에 대한 견제와 압박의 동인들이 잠복해 있음.
- 중국은 경제성장 목표 달성을 위한 안정적 자유무역질서의 현실적 필요성 때문에 향후 일정기간동안 미국과 전략적 동거를 모색할 가능성이 높음. 그러나 동아시아 지역주의 제도창출 및 확대과정에서는 지역적 리더십을 둘러싸고 상호견제가 가시화되어 나타날 것임. (미국 주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PP) vs. 중국 주도 동아시아 포괄적 경제파트너십 (EACEP) 구상)
- 미중 양자관계의 양면성(협력과 견제)은 안보분야에서도 마찬가지임. 세계 및 지역질서 유지의 책임과 관여의 정도, 역할분담을 둘러싸고 미중 양국간 이견은 상존하고 있고,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첨예한 갈등형태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음. 동시에 양국간 정책 협조 및 조정 범위를 둘러싼 갈등 가능성도 늘 열려 있음.
- 특히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 ▲중국 부상에 대한 심리적 저항감, ▲미국식 인권 문제를 지렛대로 중국을 압박할 수 있다는 보편적 가치에 대한 과도한 신념, ▲일본을 비롯한 기존 동맹국들과의 유대강화를 통해 중국 부상을 견제할 수 있다는 진영화의 논리, ▲군사력의 우위 구조를 리더십 구현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미국 군부의 주장과 ▲이에 호응하는 ‘패권복원’의 유혹 등 중국에 대한 강경한 태도로의 선회 요인은 산재해 있음.

2. 안정과 불안정이 교차하는 G-2 거버넌스와 동북아

- 패권국의 쇠퇴와 도전국의 부상이라는 구조변화의 파편들이 일차적으로 드러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은 동북아 지역임. 오바마 행정부 후반기에 들어 미국은 아시아를 미국 경제의 사활적 이익이 걸린 곳으로 지목했고 이에 따라 적극적 정치, 경제, 군사적 개입 전략으로 전환하고 있음.('Pivot to Asia')
- 중국은 현존 세계질서의 큰 틀을 선불리 변경할 의도를 표명하고 있지 않음. 당분간 질서의 안정적 관리에 유력한 보조역할을 자임하고, 연성권력을 통한 국력 투사, 공공외교 강조, 균형외교의 전략을 선호할 것으로 전망됨.
- G-2 거버넌스의 변동은 동북아 지역에서 격발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이슈는 안보문제를 중심으로 한 진영화 구도로의 전환임. 미국은 (패권 유지 비용이었던) 과도한 국방비의 삭감이라는 과제에 직면해 있고, 그 비용적 공백을 일본과 한국에 전가하려는 전략을 추구하고 있음. (MD 및 방위비 분담 이슈) (※ 전시작전권 전환 연기에 대한 미국의 우려는 한국이 계속 미국 군사력에 의존함으로써 (자주국방을 위한) 무기 구매에 차질을 빚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포함되어 있음.)
- 일본은 미국이 의도하는 대로 미국에 경사(傾斜)함으로써 지역적 진영화를 가속화시키는 국가 역할을 자임하고 있음. 아베정권은 평화헌법 개정, 집단적 자위권 이슈를 통해 미국 국방비의 공백을 일부 메우면서 중국에 대한 견제 역할에 한 축을 담당하려는 전략을 가짐.

- 북한 문제에 대한 미국의 전략적 무관심은 동북아 지역의 안보 민감성을 유지하려는 의도와 맞물려 있고, (미국 외교의 정책적 우선순위와도 관련 있지만) 북한문제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는 해결보다는 긴장성 유지가 더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음. 미국의 동북아 지역에 대한 핵심전략은 한미일 동맹강화에 있음. (일본에 대한 집단자위권 승인, 한국에 대한 MD 참여 강요)
- 중국은 한반도 문제가 한국 정부의 공세적 대북전략 중심의 대결 구도로 전이되는 것을 방지하고, 한미일 3각 공세로부터 북한체제를 안정적으로 보호하는 것에 초점을 두어왔음.
- 일본에 대해서는 미국에의 경사(傾斜)를 견제하는 한편, 한국의 맹목적 종미주의를 비판하고, 북한에 대한 안정적 균형자 역할을 도모해 왔음. 그러나 지금까지 중국의 태도는 국력의 성장과 더불어 중국에 대한 미국 일본의 반(反)중 연합전선 형성에 저항하면서, 공세적 태도로 바뀌게 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음. 따라서 동아시아에서 미국과 일본,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 간의 대립적 양극화가 나타날 가능성도 결코 배제하지 못함.

3. 한국 외교 전략의 초점과 민주당의 전략

- 동북아에서 대립질서가 가시화되면 한반도에 정치군사적 압력이 집중화될 것은 자명함. 한국이 가져야 하는 외교전략의 핵심은 한반도 및 한국 외교를 협착하는 구도를 어떻게 유연하게 타개해 나가면서 진영화 구도가 형성되지 않도록 하느냐에 있음. 한국 외교의 전개방향에 따라 동북아 지역질서가 전환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한국 외교는 동북아 질서를 결정하는 풍향계와 같음.

- 현 시점 중국이 박근혜정부의 신뢰프로세스를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이유는 지역 전반의 진영화 구도 형성을 가속화시키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이며, 한국을 중간지대에 붙잡아 두려는 의도이기 때문임. 그런 의미에서 한국 외교도, 동북아 질서변동의 격발요인도 모두 시험대에 올라 있음.
- 따라서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비판적으로 독해하고 동아시아평화협력구상의 구체적 실천여부를 견인하는 것이 민주당의 전략이어야 함.
-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신뢰는 남북한 양측의 화해노력과 공동이익 확보 없이는 어려움. ▲자칫 MB 정부와 같이 전제 조건으로 작동하게 되면 포용과 압박 양면전략에서 압박만 남게 됨. 그리되면 한반도 위기 국면은 동북아 진영화의 촉발요인이 될 것임. ▲신뢰프로세스와 동아시아평화협력구상을 매개하는 전략이 부재함.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 핵심임.
- 동아시아 평화협력 구상: ▲다자적 틀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외형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이나 이 또한 구체적 전략이 부재함. ▲한국의 전략적 이니셔티브 문제 (촉진자 역할). ▲한반도 평화체제와 동아시아 평화협력 구상과의 논리적 연계문제 ▲양자동맹과 다자협력전략 병행발전 문제, ▲중미간 줄타기 곡예에서 외교적 고립극복문제

한중관계 관련 전면적 협력동반자 관계

이남주 (성공회대 중국학과)

1. 한중관계의 발전과 평가: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의 의미

0 한중관계의 변화 : “우호협력관계” - “협력동반자관계” 구축(1998년) - “전면적 협력동반자관계” 구축(2003년) -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 구축(2008년) -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의 내실화(2013년)

0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는 중국이 이미 여러 나라 혹은 지역협력기구와 맺고 있는 관계로 특별한 협력관계를 의미한다고 보기 어려움.

0 중국은 최근 이러한 관계규정을 통해 핵심이익의 상호존중을 양자관계를 처리하는 중요한 원칙으로 제시하고 있음. 따라서 중국이 무엇을 핵심이익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우리는 이와 관련해 어떤 것을 핵심이익으로 요구할 것인가 그리고 이러한 핵심이익이 양립가능한가 등이 양국관계 발전의 수준을 결정할 것임.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의 내실화도 이와 연관된 문제임.

0 경제, 사회적 교류의 증가추세는 지속되고 있음. 한중협력이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는 물적 기반

- 무역액의 증가: 1992년 63억 달러에서 2012년 2,563억 달러로 증가
- 중국은 2004년 이후 우리의 최대 교역상대국이며, 우리는 중국의 3대 교역상대국
- 인적 교류의 증가: 상대국 방문자 수가 1992년 약 13만명에서 2011년 약 660만명으로 증가

0 양국 국민간 정서의 변화를 효과적으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음. 중국에서는 동북공정과 같이 주변국가들의 역사문제에 대한 민감성을 간과한 경우가 있고(자신의 행위가 주변국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무감각), 한국 내에서는

우발적 사건에 과도하게 민감한 반응이 반중정서의 확대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음. 양국의 지리적인 근접성과 상호작용의 빈도 등에 비하면 양국 국민간 상호이해는 매우 부족한 상황.

0 제3자 문제로 인한 전략적 마찰과 불신도 양국관계의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의 발전에 제약을 가하고 있음. 즉 한미동맹과 북중관계가 한국과 중국의 전략적 협력을 촉진하기보다는 전략적 갈등을 초래하는 요인으로 작용.

- 중국은 한미동맹이 중국에 대한 포위망 구축과 연결되는 것에 대해 우려. 2008년 5월 이명박대통령의 방중을 앞두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한미동맹은 냉전 시대의 낡은 유물”이라고 비판한 것이 이러한 우려를 직접 표명한 드문 사례. 반대로 한국 내에서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해야 한다는 논리가 확산되기도 했음.

- 한국 내에서는 중국이 북한을 지나치게 비호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불만도 증가. 특히 2008년 이명박정부 출범 이후 한국정부 내에서 이러한 경향이 강화되었음. 반면 중국 내에서는 이명박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불만도 고조되었음.

- 결국 이명박정부 시기 한중이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를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략적 갈등은 오히려 증가했다고 할 수 있음. 외교관계에서 선언이 관계의 수준을 보장해주는 것을 아니라는 점을 잘 보여주었음

0 한중관계는 긍정적 방향으로 발전되어왔으나 명실상부한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로의 발전까지 넘어야 할 벽이 높은 상황. 희망적 사고에 기댄 지나친 기대를 피하고 쉽게 해결하기 어려운 갈등요인을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차이를 좁혀가는 것이 필요하고 양국간의 이해가 일치하는 영역에서의 협력을 확대하는 점진적 접근이 필요.

2.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의 진전과 한계

0 박근혜대통령 방중 시 합의한 대화채널의 다원화와 정례화가 가장 중요한 성과.

- 청와대 국가안보실 실장과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간의 전략대화 기제 마련.

- 앞으로는 이러한 형식에 내용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
- 한국은 중국과 전략적 협력을 발전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구상은 아직 없는 상황. 여전히 북한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접근하는 문제가 있음.
- 양국간 대화채널이 정부주도라는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0 첫째, 박근혜정부 이후 북핵문제와 관련해 이명박정부 시기 출현한 갈등을 봉합하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한중공조에 특별한 진전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남북대화과 6자회담을 위한 더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

- 노무현정부까지는 한국과 중국이 북한과 미국을 대화로 끌고나오기 위한 공조가 유지되었음. 그러나 이명박정부 출범 이후 북한문제는 한중 사이의 갈등요인이 되었음. 이명박정부의 대북정책과 한국의 중국에 대한 과도한 요구가 주요 원인.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한중간에는 이와 관련한 갈등을 줄어들었음. 중국은 박근혜정부의 신뢰프로세스가 한반도에서 긴장고조의 악순환을 차단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

- 그렇지만 한국정부는 여전히 중국이 북핵문제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표명하게 만드는 것, 나아가 북중관계의 기본 프레임을 전환시키고자 하는 과도한 목표에 지나치게 많은 외교적 자원을 소모하고 있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중정상회담 후 발표된 공동성명에서는 한반도비핵화를 추구한다는 것으로 표현. 중국은 앞으로도 한국과의 합의문 “북핵불용” 등 북한을 직접 거론하는 방식의 표현을 담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견지할 것임.

- 2012년 12월부터 2013년 4월 사이의 중국의 대북압박 강화는 한국정부의 외교적 노력의 결과라기보다는 북한의 모험주의적 태도에 대한 중국의 적극적 대응의 결과. 5월 이후 북중관계는 복원국면에 진입했음.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중국과 북한 관계를 전환시키려는 방식으로 이 문제에 접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 중국이 북한의 핵개발을 반대한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으며 문제는 중국이 이를 위해 북한에 대해 어느 정도의 압박을 가할 것인가가 문제. 중국이 한국과의 대화에서 북핵을 불용한다는 선언을 이끌어내거나 북중관계를 변화시키려는 노력보다는 실질적으로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한중협력이 필요.

- 그렇지만 현재 6자회담 재개의 조건 등과 관련해서는 중국과 한국의 입장

차이가 오히려 커지고 있는 것은 긍정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 없음. 조속한 재개 vs 전제조건 충족(핵과 미사일 모라토리움 +알파)

- 한국이 이와 관련해 중재역할을 할 수 있는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는가가 앞으로 한중협력에 매우 중요한 변수가 될 것임.

0 둘째, 동북아 안보협력과 관련해서는 말은 많지만 뚜렷한 성과는 없는 상황. 오히려 중국과 미일동맹 사이의 대결구도가 정착되어가면서 한국의 딜레마는 커지고 있는 상황.

- 중국이 박근혜정부에 호의적 태도를 보인 것에는 일본변수가 중요하게 작용했음. 즉 일본의 우경화가 심해지고 중일 사이에 다오위다오(센카쿠열도) 영유권을 둘러싼 갈등이 고조되는 시점에서 한국과의 공조를 강화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음. 중국 내 한 칼럼에서는 동북아에서 중국에 대한 포위망 중 한국이 가장 약한 고리가 될 수 있다는 내용도 등장했음.

- 중국은 한미동맹 자체를 문제로 삼지는 않지만 이것이 미일동맹과 통합되면서 한미일삼각동맹체제가 구축되는 것에 대해서는 아시아에서 대중국포위망의 강화로 간주하고 있음. MD문제에 대한 중국의 민감한 반응도 이것이 결국 중국 대륙간탄도미사일을 겨냥한 것이라는 이유 외에 이를 매개로 한 미일의 군사협력체제가 강화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음.

- 미국이 pivot to Asia 정책을 추진하는 동시에 군사비 절감을 해야하는 딜레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일본의 군사적 역할을 확대시킬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문제는 앞으로도 중일, 미중 사이의 중요한 갈등요인이 될 뿐만 아니라 한국을 매우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만들 가능성이 높음.

- 동북아에서 새로운 안보협력을 추진하지 못하면 동북아정세가 부정적인 방향으로 발전하는 것을 막기 어려운 상황이며 이와 관련한 한국의 역할이 중요한 문제로 등장.

0 셋째, 동아시아경제협력과 관련해서 한국은 중국과의 FTA협상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미국 주도의 환태평양동반자협력(TPP)에 참여를 요구하는 압력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 TPP의 경우는 중국을 배제한 아시아태평양 경제통합체 건설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역시 미중간의 힘겨루기를 촉발할 가

능성이 높음.

- 일본은 2010년 하토야마 총리 시절 미국의 요청을 받았고 아베가 총리에 당선된 이후인 2013년 7월부터 협상에 참여. 동남아에서는 브루나이, 베트남,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이 참여하고 있음.
- 중국은 “아세안+3”를 중심으로 동아시아경제협력체를 추진한다는 것이 기존 입장이나, 2012년 아세안 주도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이 시작(2015년 체결을 목표로)된 이후 “아세안+6” 구도의 경제공동체구상에도 긍정적 입장.
- 미국은 중국의 TPP 참여를 환영한다는 입장이나 중국이 환경보호, 노동조건과 같은 이슈까지 다루는 TPP에 참여가 어려울 것임. 결국 TPP가 RCEP 혹은 ‘ASEAN+3’와 경쟁하는 구도가 출현할 가능성이 높음. 동북아에서는 한국, 동남아에서는 인도네시아가 이 경쟁구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따라서 한국의 TPP 참여가 한중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음. 한국으로서는 미일이 주도하는 협력구도에 끌려들어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적어도 한중FTA를 먼저 해결할 필요가 있음.

3. 한중관계의 발전방향

0 한미동맹과 한중협력의 병행

- 한미동맹의 군사적 성격을 약화시키고 한국의 주도적 역할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음. 이를 통해 한국이 미국의 대중봉쇄의 한축을 구성할 것이라는 우려를 해소시켜야 함.
- 중국에 대해서는 수평적이고 호혜적 협력을 지속될 수 있는 기초를 강화해야 함.
- 한중관계에서 핵심이익은 충분히 양립할 수 있는 상황(중국의 경우 사회주의제도, 지속적인 경제성장, 영토 및 주권의 안정성-티베트, 타이완 등-)이나 앞으로 양국의 핵심이익이 충돌하는 상황이 출현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 특히 해양경계문제(배타적 경제수역)를 신중하게 그리고 대화를 통해 해결하기 위해 노력.
- 한국의 핵심이익은?

0 지역협력을 통해 미중경쟁을 관리하고 동아시아의 번영과 발전을 지속시킬 수 있는 환경조성

- 동북아와 동아시아에서 지역협력의 모멘텀이 약화되고 있으며, 미중경쟁이 지역의 균열을 심화시키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음.
- 한국과 같은 중소국들은 개별적으로는 미중경쟁 혹은 미중갈등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며, 이러한 상황은 앞으로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될 것임.
- 동아시아 차원에서는 중소국 사이의 네트워크를 강화해 미국과 중국이라는 초강대국을 지역협력이라는 틀 내에서 관리할 수 있는 구상이 필요.

0 한반도 문제해결을 위한 협력 강화

- 현재 교착상태에 있으나 언제든지 다시 위기가 출현할 수 있는 상황. 중국의 대북압박에 기대어 상황을 지금처럼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 특히 앞으로 핵능력이 더 강화된 북한의 행동은 예상하기 어려움.
- 북한의 핵능력 강화에 제동을 걸도 비핵화를 위한 대화의 모멘텀을 만들기 위한 더 적극적인 이니셔티브가 필요.
- 중국과는 두만강유역개발을 매개로 하는 지역협력구상을 적극적으로 협의할 필요가 있음.

0 양국관계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야당(민주당)도 개인적 네트워크에 의존한 중국라인보다는 공식적 대화채널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싱크탱크간 교류의 정례화를 생각할 수 있음.

0 한국외교가 지향할 방향으로서는 세력균형적 함의가 강한 ‘균형자론’과 같은 것을 내걸기보다는 협력을 매개하고 촉진하는 그리고 협력을 위한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국가로서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것이 더 바람직.

외교환경과 과제 분석

김준형 (한동대, 국제정치)

■ 아시아 패러독스(Asia Paradox)와 박근혜 정부의 신뢰외교(Trustpolitik)

- 한국외교의 키워드로 부상: 아시아국가들 사이에서 경제적 상호의존도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 정치 및 안보분야의 협력수준은 매우 낮을 뿐 더러 영토분쟁, 군비경쟁, 역사왜곡논쟁, 핵무기개발 등 지역안정을 위협하는 요소가 증가되고 있는 측면을 강조한 것임
- 최근 개최된 한-아세안정상회담과 동아시아정상회담(EAS)에서 재강조: 한미 및 한중 정상회담에서 제안했던 동북아평화협력구상과 함께 박근혜정부의 대아시아 다자외교 이니셔티브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 아시아 패러독스 극복의 해결책을 신뢰외교에서 찾고 있음: 점진적 신뢰 구축을 통해 남북관계는 물론이고, 긴장과 갈등의 아시아를 신뢰와 협력 관계로 구축해나간다는 목표임
- 전 세계가 동아시아를 차세대 경제발전과 성장의 엔진으로 이해하고 아시아에 중점을 둔 외교 전략으로 방향전환을 하고 있는 시점에서 중심국인 중국, 일본, 한국의 대립과 갈등구조 확대일로는 역설적임

■ 아시아 패러독스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신뢰외교(Trustpolitik)의 장단점

- 장점: (1) 동북아 및 아시아 전체 국제정치에 대한 정확한 진단
(2) 국제사회의 공감과 지지
(3) 아시아외교무대에서 주도권과 리더십 발휘 기회(중견국 외교역량)
- 약점: (1) 기능주의 접근의 한계 내포: 연성이슈로의 spillover 어려움¹⁾
(2) 신뢰구축과정에 오랜 시간 필요하고 참여국의 적극적 헌신 필요
(3) 한반도 경성이슈와의 기회비용의 문제: 외교자산 누수 가능성

【한반도 패러독스 ❶ : 한미동맹 강화-신뢰외교의 역설】

1) 용어자체가 높은 경제적 상호의존도라는 연성이슈에서의 협력관계가 경성이슈로 확산되지 않는다는 어려운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순환논리가 되기 쉬움.

- 동맹 강화와 진영외교의 부활 vs. 다자 및 통합질서
- Tectonic Change (지각변동): 동북아 세력재편의 불안정성으로 인한 경쟁과 갈등 구조
- **세력전이(power transition) 본격화**: 미국과 일본의 하락과 중국의 부상이 2008년 global financial crisis 이후 본격화
- 미국이 여전히 샌프란시스코체제의 Hub-and-Spoks 중첩양자동맹을 선호하고 동북아 통합은 중국 중심이 될 것을 우려하여 반대 입장인데 이는 박근혜정부가 추진하는 다자외교에 가장 큰 장애물이 될 수 있음
- 북·중·러와 한·미·일의 진영구도가 부상: 신냉전의 가능성
- 남북관계 악화: 동북아 진영외교 형성에 땔감 역할을 하고 있음
- 군사적 측면의 동맹 강화와 진영외교는 박근혜정부 신뢰외교/다자외교와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임

【한반도 패러독스 ② 미중관계의 패러독스와 한국의 선택】

- 미국과 중국의 경제적 상호의존 심화 vs. 패권경쟁상대로서의 군사적 불신
- 교역량 4850억불: 중국은 캐나다에 이어 미국의 두 번째 교역국, 미국은 EU에 이어 중국의 두 번째 교역국
- 미국은 중국의 최대상품수입국, 중국은 미국채 최대보유국(1조2500억불)
- 미국의 Pivot to Asia 또는 Rebalancing 전략이 중국포위 전략이라는 인식
- 중국 군비확장: 90년대 이후 매년 두 자리 숫자 군사비 증가 및 전략무기 개발(핵잠수함, 항공모함, 대항모미사일, 중장거리 탄도탄, 스텔스기)
- 영토분쟁에서 강경한 자세를 포함해서 아시아에서의 힘 과시
- 미국의 선택: Containment vs. Engagement (Soft Containment)
- 중국의 선택: Challenge vs. Accommodation (Anti-Access/Denial Power)
- 구조 및 지정학적 변수: 신현실주의 패권충돌
- 한국의 딜레마적인 선택지:
 - 1) 미중이 갈등관계를 노정할 경우 한국은 동맹국 입장에서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가?
 - 2) 중일이 갈등관계에 놓이고 일본과 동맹을 맺고 있는 미국이 일본을 지지할 경우 한국은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가?

【한반도 패러독스 ③ 미일동맹 강화와 한국의 선택】

- 동맹의 보완재 vs. 대체재?
- 미국의 동북아동맹정책의 핵심: Outsourcing
- 미국의 목표: 한-미-일 삼각동맹 구축
- 일본과 중국의 지역패권을 두고 벌이는 패권경쟁 본격화
- 일본의 전략목표: 1) 최대치: 미일동맹 강화를 통해 중국 봉쇄
2) 최소치: 미국이 떠날 경우를 대비한 재무장
- 코너스톤(Cornerstone) vs. 린치핀(Linchpin) 논쟁은 사실상 무의미함
- 일본의 우경화와 미국의 아시아전략의 보합: 집단자위권 지지 이유
- 한국의 대일 및 대중 정책과 미국의 아시아전략은 상치
- 한국의 딜레마적인 선택지
 - 1) 미국이 한-미-일 삼각동맹을 압박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 2) 일본의 과거사문제, 독도와 센카쿠열도에 있어 미국의 반대에도 중국과 공조를 통해 일본을 압박할 것인가?
 - 3) 당장 집단적 자위권문제에 어떤 입장을 보일 것인가?

【한반도 패러독스 ④: 전략동맹의 양면성】

- **전형적인 Alliance paradox:** 연루(entrapment)와 방기(abandonment)
- 한미동맹은 비대칭동맹이지만 상호이익의 접점: 약소국은 강대국으로부터 보호를 약속받고, 강대국은 안전보장을 제공하는 대가로 영향력을 행사 & 이를 국제정치에서 세력을 확장시키는 중요한 수단으로 삼음.
- 미국이 한국과의 동맹을 교두보로 지리적으로 동북아의 역외국이라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주요 행위자로 장기간 영향력을 행사해 온 것은 한미동맹을 통해 미국이 얻을 수 있는 중요한 이익이었음.
- 동맹의 형성부터 지금까지 한국은 연루보다 유난히 방기에 대한 우려가 강했으며, 이는 대미의존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
- 한국의 급속한 국력 신장에도 불구하고 안보에 대한 대미의존도는 지속: 북한의 핵개발과 도발적 성향에 기인한 바가 크지만, 동맹의 관성 작용도 일정부분 있다고 판단됨 (동맹의 관성 또는 중독현상)

■ 전략동맹

- 이명박정부와 부시정부의 상이한 목표
- 이명박정부는 한미갈등을 두 진보정권의 대북 햇볕정책과 대미 자주성확보에 있다고 판단하고, 전략동맹을 통해 갈등관계 탈피가 1차 목표

- 미국 세계전략변화: 해외주둔군 재배치(GPR) 계획의 일환으로 우선순위는 주한미군의 유연한 운용(strategic flexibility)과 세계전략차원에서 한미동맹 적극 활용하겠다는 것이었음
- 2013년 5월 한미정상회담에서 21세기 '포괄적 전략동맹'로 승계
- 탈냉전 이후 동맹의 상호성 논란 지속: 전작권, MD, 주둔분담금 등
- 동맹의 격상 이면에는 한반도에 국한된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범위를 넘어선 연루의 위험이 커짐: 미국의 세계전략의 부담을 떠안을 위험(중국봉쇄, 대 테러전쟁, 기타 해외분쟁지역에 원하지 않는 군대파견의 위험)

【한반도 패러독스 ⑤: 동맹 강화와 양국 국내정치의 역설】

■ 동북아 전략적 환경과 국내요인으로 인한 강경한 대외정책

- 미국과 일본의 하락 vs. 중국의 부상: 거대한 판도변화 시작
- 6개국에 신정권(미국-재임) 거의 동시적 출범
- 안보담론이 평화나 협력담론을 압도하고 있는 상황
- 동북아역내국들의 강경한 대외정책 및 신민족주의적 경향
 - 북한: 김정은정권의 권력공고화를 위한 대외강경노선
 - 일본: 우경화 드라이브와 재무장
 - 러시아: 반미의식의 선동을 포함한 강한 러시아의 부활정책
 - 중국: 공산당 독점구조의 정당화 기반이 약해지자 민족주의 부활조짐
 - 한국: 안보담론 강조 및 대일강경책
 - 미국: 중국위협론과 봉쇄론

■ 남북관계 악화와 한국의 국내정치

- 전통적 위협은 감소하는 대신 비대칭 위협은 커짐
- 국내 보수-진보의 이념분열은 안보담론을 더 강화시키고 있음
- 대북인식이 강경: 안보포폴리즘
- 한국판 선군정치: 군출신인사의 국방-외교-정보 라인 독식

■ 동맹강화와 미국의 국내정치

- 재정절벽과 미국내 신고립주의(Neoisolationism) 분위기 커짐
- 미국내 대북인식 최악: 알카에다와 비교될 정도로 악화
- 북한의 효용가치 존재
- 오바마의 아웃소싱 및 가벼운 발자국(Light foot print) 외교

- 한국의 무임승차에 대한 비판여론 고조: 저작권 반환 연기와 연결
- 미국정부는 이미 일단은 연기 쪽으로 결심하고 여론추이 관찰 및 협상카드 활용하는 차원으로 추측됨
- 향후 중간선거 및 대선에서 네오콘의 입지 부활여부가 관건임

【한국의 대응전략】

- (1) 아시아에 일방적 패권국가의 등장 막고 다자협력체제구축에 적극 나서야: 그러나 세력전이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국가별 전략이 converge보다는 diverge 하는 상황에서 한국은 전통적 동맹국과 우호국인 미국과 일본과 관계도 손상시키지 않는 전략을 구사해야하는 어려운 과제 직면
- (2) 미국의 아시아전략에 대한 보다 정확한 이해: 미사일방어, 전략적 유연성, 한-미-일 3각 동맹 구축 의도
- (3) 균형외교 및 전략적 모호성 유지: 진영을 넘어서는 소다자적(한-미-일, 한-중-일, 한-미-중) 중첩적 전략대화 네트워크 구축함으로써 미중관계가 나쁠 때는 '갈등의 완충자'로서, 좋을 때는 '협력의 촉진자'로서의 역할
- (4) 한-미-일 3각 관계에서 분명한 역할 설정할 필요가 있음: 한국의 군사적 역할, 한미동맹의 역할, 한반도 관련한 미일동맹의 역할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한-미-일 삼각동맹 반대)
- (5) 대일외교 재평가: 일본군사대국화 반대원칙을 고수함과 동시에 실용적 대일 외교노선 병행(대미 레버리지로 활용법 고민할 필요가 있음)
- (6) 중국 견제 또는 봉쇄하기 위한 MD 참여 반대

【민주당의 대응전략】

- (1) 박대통령의 공약이행 촉구: 신뢰프로세스(*Trustpolitik*) & 균형(*Alignment*)
- (2) 한미관계 심화엔 찬성하지만, 한미동맹의 냉전적 군사주의는 반대
- (3) 군사력강화를 통한 안보유지도 중요하지만 남북관계 개선을 통한 비용 절감 및 평화담론 부활(기회비용)
- (4) 천문학적 비용의 군비경쟁을 가속화시킬 킬체인 & KAMD 재검토 요구 (복지비용문제와 연결)
- (5) 저작권 환수 연기 반대
- (6) 당 주도로 진보 및 평화 지식인 한중, 한미, 한일 네트워크 구축